

2013. 6. 7(금) 제 1 회의

제 1 분과

지역균형 발전방안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개와 결과, 1972-2012

임 형 백(성결대학교 교수)

I. 서론

이 논문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을 살펴보았다.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 모두 궁극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나, 초기 출발점에서 투자와 집종의 우선순위에 차이를 둘 뿐이다. 즉 불균형발전론도 초기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불균형적인 집중투자를 할 뿐, 궁극적으로는 파급효과를 통하여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한국은 출발점에서 불균형성장론을 선택하였다.

III장에서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살펴보았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다만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성장거점(growth center)¹⁾전략이라는 불균형발전전략을 선택한 이후, 기대하였던 파급효과는 미약하고 오히려 역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보완적 정책이었고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IV장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다루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내놓았다. 이를 통하여 보완적 정책에 머물던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전면에 내세웠다.

V장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다루었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꾸고, 이는 산술적 평균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임형백, 2012c).

VI장에서는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오히려 지역불균형

1) 성장거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임형백, 2012, 한국 국토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경기: 한울.을 참고바람.

발전을 가져오는 다양한 현실적 여건들이다. 둘째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나누어주기식(pork-barrel)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불균형발전은 다양한 지표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지역불균형발전을 Friedmann(1973: 65-84)의 ‘공간구조분석’의 공간흐름의 1단계인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VII장에서는 경상북도의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역낙후도 지표와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까지의 지역불균형발전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이번에는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VIII장은 결론이다. 이 논문의 주목적은 그동안의 한국의 균형발전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VII에서 경상북도의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만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은 정밀한 지역분석 뒤어나 가능하다. 따라서 VIII장 결론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II.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

1. 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theory of balanced growth)은 부문 간 보완적 투자(complementary investment)를 통한 동시적인 발전(simultaneous)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균형성장전략은 Rosenstein-Rodan(1961), Nurkse(1953), Lewis(1954)에 의해 주창되었다(Sundrum, 1983: 180-181)

이 전략들은 한 부분의 유효수요가 다른 부분의 활동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여 산출에 대한 적절한 유효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부문 간에 주어진 자원을 적정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개별 부문은 생산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에 비례하여 성장하게 된다(김용웅 외 2인, 2009: 146).

Rosenstein-Rodan(1961)은 저발전국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해 최소 필요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 이른바 ‘빅 푸시(big-push) 전략’을 제시하였다(Sundrum, 1983: 160).

2. 불균형성장이론

Hirschman(1958)은 『Th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을 통해 균형발전이론에서 제시한 ‘빅 푸시 전략’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전제하면서 불균형성장이론(theory of imbalanced growth)을 제시했다. 자원이 부족한 저발전 국가의 경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자원의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모든 산업부문에 동시에 투자해 바람직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김용웅 외 2인, 2009: 147). 불균형성장이론도 초기의 투자에 있어서 불균형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파급효과를 통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표 1〉 파급효과와 역류효과

Myrdal, G(1957)	파급효과(spread effects)	역류효과(backwash effects)
Hirschman, A. O(1958)	누적효과(trickling down effects)	분극효과(polarizing effects)
의미	핵심부지역의 발달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축적된 부가 주변부지역으로 확산·발전되어 나가는 현상	한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인구와 자본, 기업체 등이 빠져나가 자원이 중심부로 모여드는 현상
발생하는 상황	①주변지역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경우 ②주변지역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경우 핵심지역에서 집적의 비경제성(agglomeration diseconomies)이 나타나 주변지역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경우 ③정부의 지역정책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경우	①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에 재화나 서비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주변지역에서 핵심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경우 ③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자본의 이동

자료: 임형백·조중구, 2004: 29.

Ⅲ.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의 균형발전정책

한국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²⁾(The National Territory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은 1972년에 시작되었다. 국토가 커다란 나라는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나, 한국은 국토가 좁고, 지방정부의 계획역량도 부족하고, 특히 개발 초기에 정부주도의 효율적인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주도의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국가(중앙정부) 단위의 계획에 대하여는 국토개발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지방정부 단위의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임형백, 2013b: 129).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기본목표를 첫째,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둘째, 생산적·자원절약적인 국토의 이용, 셋째, 복지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 넷째, 통

2)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과거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을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에 대비한 기반의 조성으로 잡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기본목표를 첫째,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둘째,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셋째, 지구촌을 열린 개방국토, 넷째,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로 잡고 있다(최병선 외 2인, 2004: 167).

〈표 2〉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기별 구분과 특징

구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1인당GNP (책정시점)	\$319(1972)	\$1,842(1982)	\$6,749(1992)	
배경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인구의 지방정착 ·수도권의 과밀완화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완화 ·국제화와 개방화의 진전 및 통일여건성 숙에 대비	·21세기를 맞아 세계 화와 지식정보화, 지 방화 및 환경중시시대 에 부응한 비전과 전 략 수립
기본목표	·국토이용관리의 효율 화 ·개발기반(SOC)의 확 충 ·국토자원개발과 자연 의 보호·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인구의 지방정착유 도 ·개발가능성의 전국 적 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 고 ·국토자연환경의 보 전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의 형성 ·생산적·자원절약적인 국토의 이용 ·복지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 ·통일에 대비한 기반 의 조성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 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 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 국토
개발전략 및 정책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 축 ·교통·통신·수자원 및 에너지공급망 정비 ·나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국토의 다핵구조형 성과 지역생활권 조 성 ·서울, 부산의 성장역 제 및 관리 ·지역기능강화를 위 한 교통·통신 등 사 회간접자본 확충 ·나후지역의 개발촉 진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의 억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부분 의 투자 확대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관 련제도 정비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개방형통합국토축을 형성하기 위한 연안국 토축과 동서내륙축 구 축 ·10대 광역권을 육성 하고, 산업별 수도 육 성 ·주요산맥과 10대 강, 연안지역을 네트워크 화하여 통합관리 고속기간교통정보망을 확충하고, 동북아 물 류중심기지 육성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의 전개
권역구분	·4대권 ·8중권 ·17소권	·28개 지역생활권 -대도시생활권(5) -지방도시생활권(17) -농촌도시생활권(6)	·9개 지역경제권 ·특정지역	·6개 국토축 ·시·도
특징 및 문제점	·(성장)거점개발방식의 채택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양대도시의 성장역 제 및 성장거점도시 의 육성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 추구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 형 지속	·수도권의 성장역제 및 지역경제권 육성 에 의한 국토균형발 전 추구 ·지방의 경제활동여건 취약으로 수도권 성 장의 지속	·국토환경의 보전을 중 시하고, 국가·지자체·주 민의 동참계획이며, 20년의 장기적인 관점 에서 계획수립

자료: 최병선 외 2인, 2004: 167.

한국의 국토종합계획은 불균형발전론을 기초로 출발하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 채택한 성장거점(growth center)전략은 대표적인 불균형발전전략이다. 고전적 공간지리학은 두 개의 조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W. Christaller와 A. Lösch가 대표하는 독일학파의 중심지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의 공간적 분극(polarization) 현상을 논의한 F. Perroux와 그의 후학에 의한 프랑스-벨기에 학파의 성장극 이론이다. 이후 성장극 이론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경제발전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성이 새로운 개념의 구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개념이 지리적 공간상의 성장적 입지, 곧 도시(city or urban)를 의미하는 성장거점이다(임형백·조중구, 2004: 29).

성장거점이론은 선도산업(leading industries),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파급 및 역류효과(spread and backwash effect) 등 3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용웅 외 2인, 2009: 182). 성장거점도시의 일반적인 의미는 첫째 지역의 중심지이며, 둘째 인구·경제·활동·소득 등의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고, 셋째 주변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성장의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도시이며, 넷째 계획적인 노력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다.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장거점도시의 개념은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 ‘시급도시 가운데 지역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로서, 주변낙후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규환, 2005: 75-76). 이때 서울과 부산이 양대 성장거점으로 육성되었다.

한편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경제권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즉 불균형발전을 대전제로 출발한 한국의 국토정책은 1982년부터 불균형발전의 피해를 인식하고 대응하여 왔다(임형백, 2013b: 131).

IV.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³⁾

지역개발정책은 2003년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참여 정부는 이전까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3) 등은

3)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3년 4월 추진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였으나, 국회에서 원래의 명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되살렸다. 이후 이명박정부는 추진기구의 명칭을 2009년 4월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다.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되, 광역화·특성화·분권화·자율화라는 세기적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역발전의 키워드를 ‘균형’에서 ‘발전’으로 바꾸고, 이는 산술적 평균보다는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임형백, 2012c).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였다(김광호, 2008: 29).

참여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불균형성장론을 추진하면서 보완적 정책 수준에 머물던 균형발전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즉 참여정부 이전부터 균형발전정책은 있어왔으나, 참여정부처럼 균형발전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권은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한다(임형백, 2012c).

〈표 3〉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교

명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간	· 2000-2020	· 2006-2020
기조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목표	· 4대 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 5대 목표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복지국토, 통일국토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
국토공간 구조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연안국토축+ 동서내륙축	· 개방형 국토축과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π 형 국토축+(7+1) 권역)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추진전략	· 5대 전략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6대 전략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지역개발	·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 지역혁신체계 ⁴⁾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산업단지	· 수요자 중심의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선택을 중시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 기업하기 자유로운 자유항지역 개념 도입	·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로 산업단지를 개선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
관광	· 국제적 문화·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권 조성 등 환경성, 문화성 강조	· 동북아 관광거점의 조성 · 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발전
동북아	· 동북아를 겨냥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신개방전략거점 구축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 ·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과 지역간 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한	·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 남·북 연계교통망의 복원	·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환경	· 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	·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수자원 방재	· 유역권별 종합적 하천관리를 통해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 수질, 방재 등을 통합 관리	·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예방적·통합적 방재체계 구축
교통	· 30분내 기간교통망 접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교통망체제를 제시 · 동북아 관문기능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망구축을 강조 ·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 7×9 간선도로망 지속 추진 · TCR, TSR⁵⁾ 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의 연결성 강화 · 인간중심적·친환경적 교통망 강조
정보	· 광속의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 전체를 디지털화	· 시공자재(ubiquitous)의 디지털국토 구현
도시	·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 ·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시건설
주택	·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 서민주거안정,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을 강조	·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 체계 마련
토지	· 계획적 개발(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질서 있는 국토이용관리에 중점	·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강화 · 산지 및 농지의 체계적 관리
집행	· 지방분권화 및 지역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집행 강조 · 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	· 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 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

자료: 이원섭, 2006: 5.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1990년대 초 이후 국내·외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지역혁신시스템론(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정책기조로 삼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법제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과 특별회계를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추진기구를 설치하였다. 정책의 핵심 취지는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 이른바 역동적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장재홍 외 3인, 2008: 59-60).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하고 수도권과 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을 추진하였다. 참여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세종시로는 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합해 1만8000명 정도가 옮겨가야 한다. 또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직원도 147개 공공기관에서 총 4만6000여 명에 이른다(임형백, 2012c).

기업도시는 참여 정부 시절 외자 유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출발하였다.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도요타시나 핀란드의 오울루(Oulu)시와 같은 기업특화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공론화되었다. 2005년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의 6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임형백, 2013b: 134).

〈표 4〉 기업도시

	태안	원주	충주	무안	영암·해남
성격	관광레저형	지식기반형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
사업기간	2007-2014	2007-2013	2007-2012	2009-2015	2008-2025
면적	14.644km ²	5.290km ²	7.265km ²	5.021km ²	49.535km ² (4개 지구)
도시조성비	1조1,462억 원	6,555억 원	4,265억 원	5,120억 원	2조 2,798억 원
도입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첨단의료산업	첨단전자 부품소재산업	항공 IT산업	테마파크 호텔 F1 골프장
공정	12.5%	20.2%	93%	2012년 1월 면적 축소 승인	삼호·구성은 2012년 하반기 착공 삼포·부동 인허가 추진 중

주: 무안은 2012년 국토해양부가 무안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면적은 당초 17.7km²에서 28% 수준인 5.02km²으로 축소되었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2년 말에서 2015년으로 3년 연장됐다.

자료: 동아일보, 2012.02.03.

4)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국가혁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지역이라는 하위차원에서 응용되고 있는 개념이다(이성우, 2004).

5) 중국횡단철도(TCR: trans-China Railroad),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Siberia Railroad)를 가리킨다. 한편 한반도중단철도는 TKR(trans-Korea Railroad)라고 한다.

V.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1. 세종시 수정안

한편 이명박정부는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법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개발정책’이라는 정책의 산물이다. 이후 여·야는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통하여 확정시켰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임형백, 2013b: 135).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업도시’로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야당도 반대하였고, 당내에서도 2005년 3월 여·여가 합의할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의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근혜 의원에게는 일종의 자승자박의 상황이었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세종시 수정법안」은 2010년 6월 29일 재적의원 291명 중 2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됨으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임형백, 2012c).

2. 광역권 개발계획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인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단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⁶⁾(MCR: Mega-City Region)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정해(2009)는 광역경제권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의 국토면적 및 국민경제 규모에 비추어 16개로 세분된 시·도 지자체로는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나 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자립형 지방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R&D, 인프라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갖도록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지역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경제권을 구상하게 된 것은 자연발생적 경제활동 공간과 행정통치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한 낭비적 요소와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6)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문화·관광·교통 등을 연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인근 국가와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권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역을 정한다.

〈표 5〉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전략 체계

차원	공간구조	주요목적	주요 사업 및 예산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국가경쟁력 강화	4+α 벨트(3개해안과 접경벨트, 내륙벨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5+2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광역발전계정(시도)	광역경제권발전 계획
기초생활권	점(點)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163개 시·군, 지역개발계정(시·군)	기초생활권발전 계획

자료: 임형백, 2009: 102; 지역발전위원회, 2012: 9.

이명박정부가 2009년 12월에 발표한 것이 ‘초광역권 개발계획’이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개발 기본 방향 중 하나가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국토 기반 조성’이다. 초광역권 개발계획은 동해안 블루벨트, 서해안 골드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남북접경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통일 이전의 남북 접경지역의 개발은,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배후지역의 육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임형백, 2012c). 그러나 이 계획은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산술적 균형을 비판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광역경제권정책은 세계적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소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이지만, ‘창대한 시각’에 비해 중간 시점에서 보는 성과평가는 그리 후하지 못한 편이다(김선기, 2013: 7). 실제로 이명박정부에서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지역갈등이 표출되었다.

〈표 6〉 이명박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

국책사업과제	갈등지역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충북↔원주	대구·충북 나누기
세종시수정안	충청·지방↔수도권	수정안 무산
동남권신공항	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	신공항백지화
LH이전	전북혁신도시(진주)↔경남혁신도시(진주)	진주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영남↔호남	대전 대덕

자료: 내일신문, 2011.05.16.

Ⅵ. 현재의 지역불균형발전

이 장에서는 Friedmann(1973: 65-84)은 공간구조분석(Spatial Structure Analysis)의 이론적 틀에 따라, 인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불균형발전을 살펴보았다(〈표 7〉 참조).

〈표 7〉 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공간흐름	지역공간구조
인구이동	정주(定住)패턴
투자	경제활동의 입지패턴
혁신의 채택 -특히 기업가적(entrepreneurial) 혁신을 가리킨다. -기업내에서 혁신을 채택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한다. -혁신을 채택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을 도태시키고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킨다.	권력의 공간구조 -이러한 기업가적 혁신이 축적(cumulation)된 도시는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한다. -또 도시는 이러한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도시체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위계적(hierarchical)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합병된다(consolidation). -도시는 사회에 공간적으로 통합된 하부시스템(spatially integrated subsystem)으로 여겨진다. → -혁신이 집중된 도시는 보다 커다란 혁신을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국가내의 다른 지역을 넘어 때로는 외국에까지 통제(control)를 강화한다.
혁신의 확산 -기업 이외의 분야로의 혁신의 확산에 대한 자료는 부족(deficient)하다. -다만, 혁신을 받아들이는 단위(unit)의 가장 두드러진(salient) 특징에 따라 소비자 혁신과 기업가 혁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공간패턴 -소비자(consumer) 혁신은 주로 수요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상품(product)혁신과 문화(cultural)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가(entrepreneurial) 혁신은 주로 공급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기술(technical)혁신과 조직(organizational)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자료: Friedmann, 1973, 1975를 참고하여 작성; 임형백, 2012b.

한국은 1972년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불균형성장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불균형성장론도 초기에 성장거점(growth center)에 대한 불균형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과급효과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또 한국은 성장거점 전략이라는 불균형성장론을 추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균형성장전략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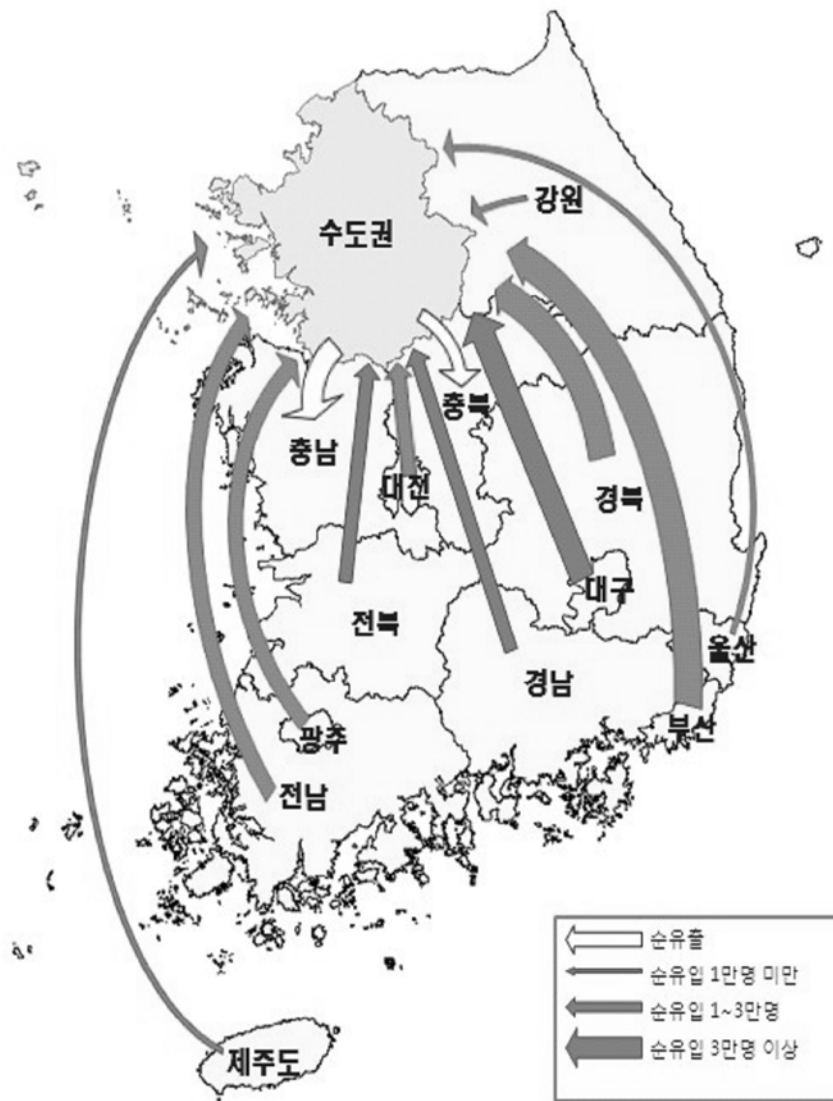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이는 수도권이 여전히 공간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방이 공간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이 공간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가균형발전이 물리적 기반 조성과 정치적 구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임형백, 2011a: 187).

〈표 8〉 2005년을 기준으로 본 2011년 인구이동 결과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울산
순유입인구	20만명	-	55만 7000명	-	-	-
순유출인구	-	38만 4000명	-	13만7000명	7만9000명	1만6000명

자료: 통계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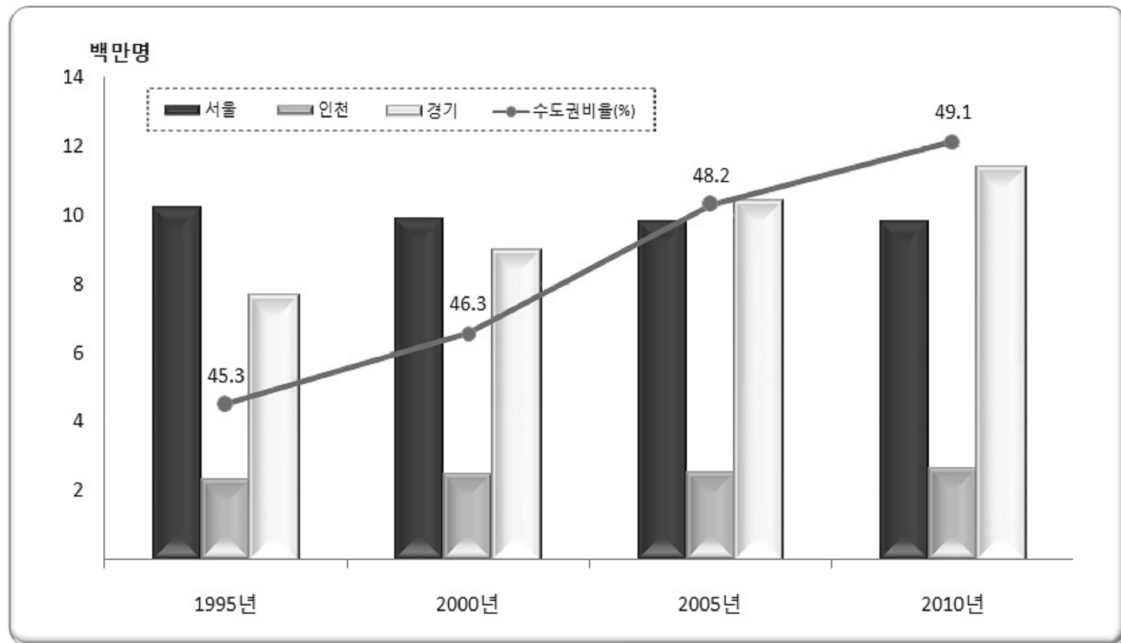
한국에서 인구인동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고, 또 이동과 소득 및 교육과의 상호상승작용이 결합되어 있다(임형백, 2012c).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전국 모든 시·도 가운데 수도권이 순유입 인구가 제일 많았다. 물론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하에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다.



자료: 통계청, 2011b: 17.

〈그림 1〉 5년 전 거주지 기준 수도권의 유입 및 유출 인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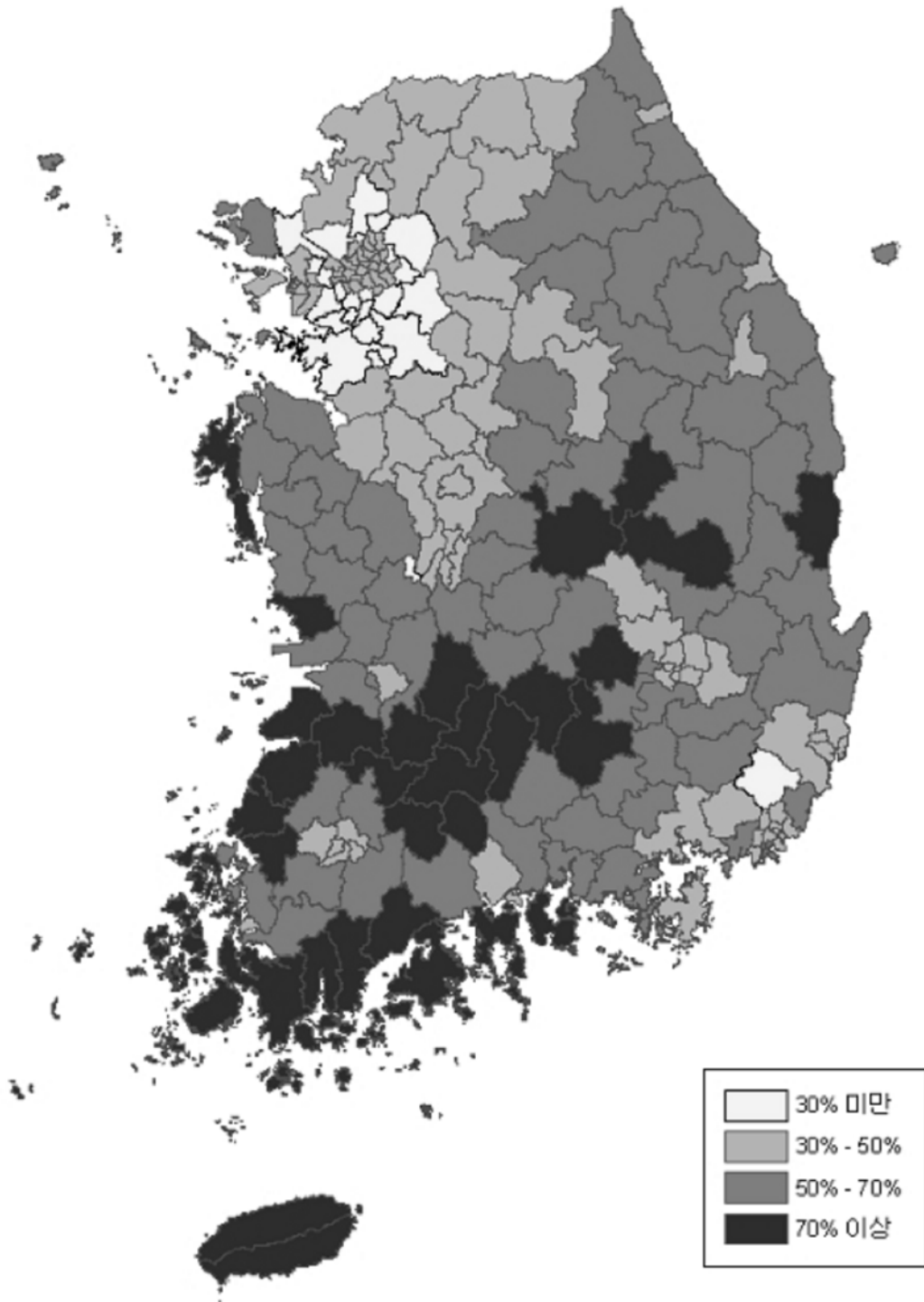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 통계청, 2011a: 4.

<그림 2> 수도권 인구 및 구성비(2010)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의 결과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수도권에서 출생한 인구의 비율은 30%가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젊고 고학력자일수록 강한 이동성을 가진다. 즉 지방에서 젊은 고학력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있어서는 젊은 고학력자의 유입이라는 긍정적 현상이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젊은 고학력자의 유출이라는 부정적 현상이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자료: 통계청, 2011b: 6.

〈그림 3〉 시군구별 거주자 출생지 비율(2010)

Ⅶ. 경상북도의 지역불균형발전

1. 경상북도의 정량적 지표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의 발전정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지역낙후도 지수⁷⁾에 따라 전국의 지역낙후도를 분석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2012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위에 속한다.

<표 11>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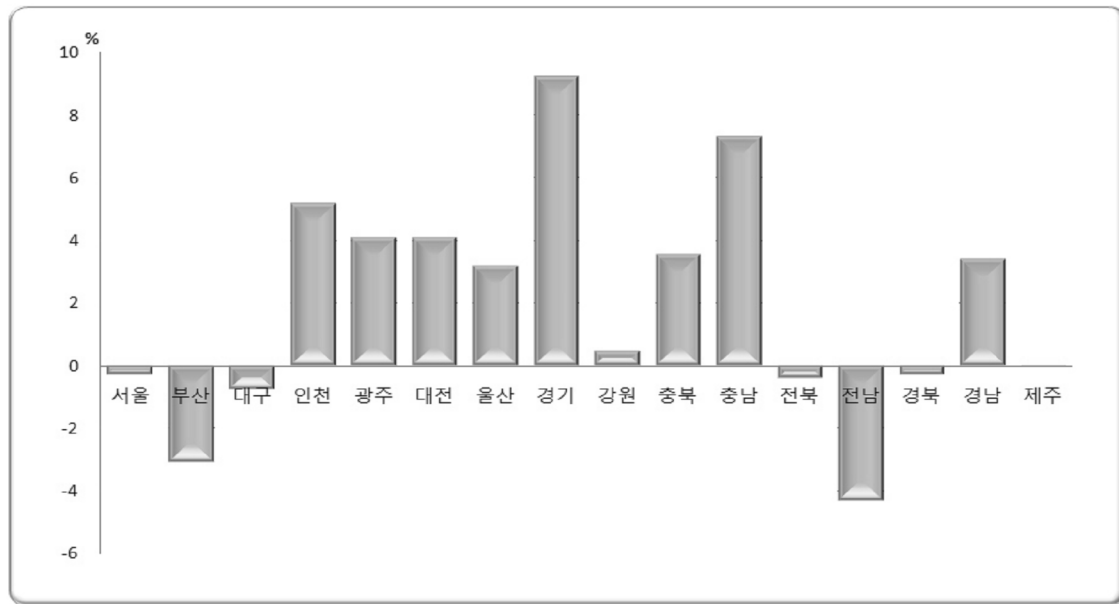
지 역		인 구		경 제			기 반 시 설			종 합	종 합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 율	승용차 등록 대수	도로율	1인당 의사수	도시적 토 지 이용률	지 역 낙후도 지 수	지 역 낙후도 순 위
특 별 시 · 광 역 시	서울	0.003	86.376	86.5	1,278	23,720	13.13	0.274	39,998	1,109	1
	부산	-0.002	103.012	56.3	3,519	25,411	4.86	0.185	17,260	0.061	9
	대구	0.001	77.995	53.4	3,793	31,192	2.76	0.199	12,404	0.201	6
	인천	0.010	66.963	72.3	5,753	27,788	3.13	0.122	11,641	0.403	3
	광주	0.007	60.643	44.6	3,912	29,230	4.64	0.203	15,354	0.187	7
	대전	0.005	62,281	55.9	2,190	31,467	3.79	0.198	14,218	0.290	4
	울산	0.006	48,147	60.9	12,286	33,197	2.87	0.111	8,859	0.609	2
도	경기	0.016	60,858	63.2	6,149	28,614	1.32	0.125	6,563	0.289	5
	강원	0.003	122,583	21.8	1,832	29,457	0.59	0.148	1,154	-0.583	14
	충북	0.007	101,616	25.8	7,544	30,192	0.90	0.120	2,976	-0.228	11
	충남	0.010	115,877	27.3	8,805	30,215	0.91	0.107	4,085	-0.089	10
	전북	0.000	121,276	16.7	3,942	28,486	0.99	0.147	3,262	-0.623	15
	전남	-0.003	153,702	11.0	3,482	25,710	0.84	0.133	2,881	-0.872	16
	경북	0.000	134,702	20.5	7,838	30,191	0.65	0.106	2,110	-0.401	12
	경남	0.011	88,754	32.9	9,199	33,055	1.21	0.115	3,280	0.124	8
	제주	0.005 (9)	86,807 (8)	25.5 (12)	0,652 (16)	31,199 (4)	1.73 (8)	0.130 (9)	3,454 (10)	-0.477 (13)	13

주: ()안 숫자는 각 지표별 순위를 나타냄.

자료: 최막중 외 2인, 2012: 107.

7) <표 9>에서 사용된 8개 지표는, 건설교통부, 2003.2.21,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지침에서 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사용되었던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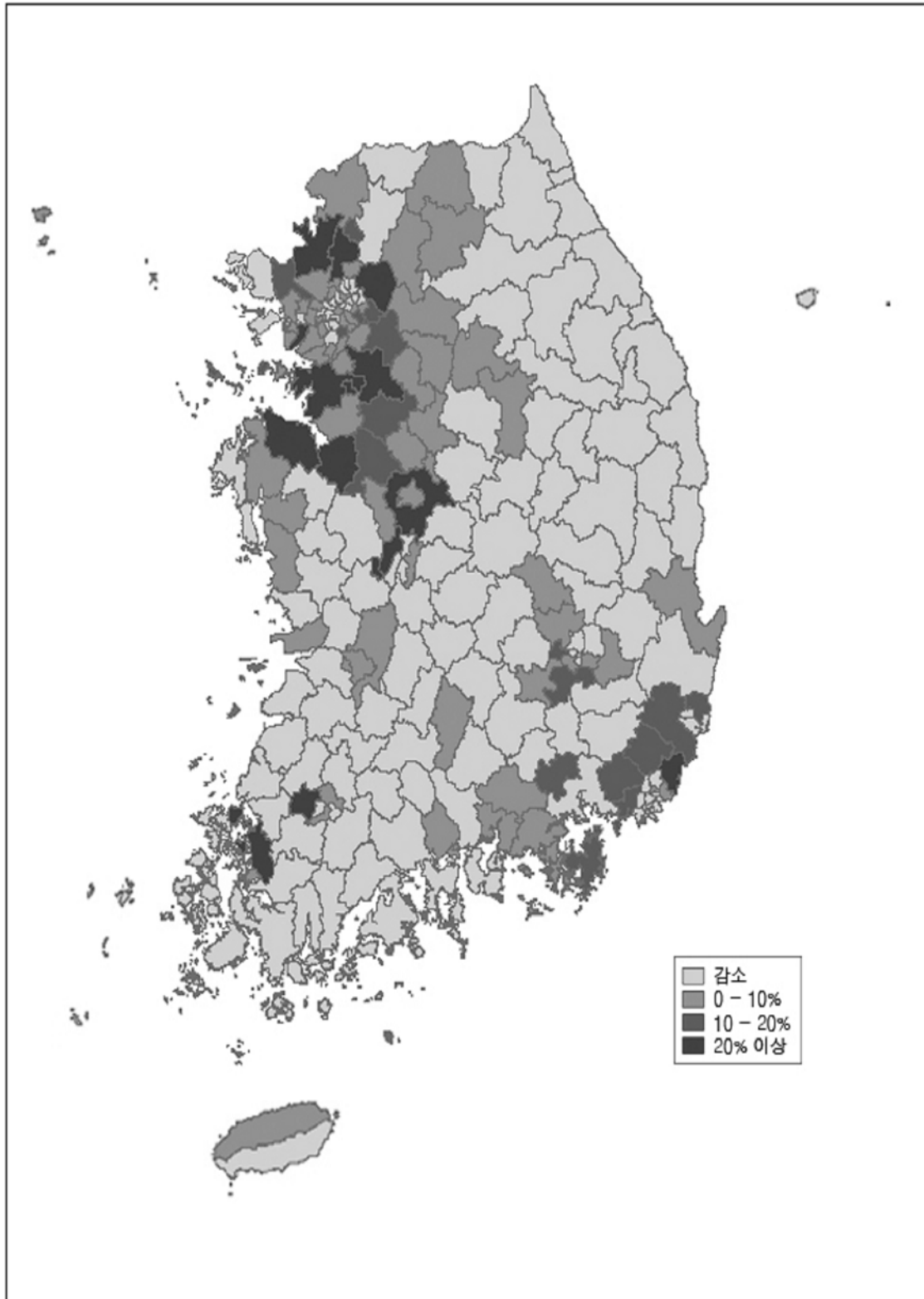
경상북도의 인구는 약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밀도는 km^2 당 486명으로 2005년의 474명보다 12명 높아졌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기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1a: 5). 더구나 전국적인 인구증가의 감소 현상을 감안하면 경상북도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구감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특이한 상황이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자료: 통계청, 2011a: 6.

<그림 4> 2010/2005 시도별 인구 증감률

아래 <그림 5>를 보면, 오히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대구와 포항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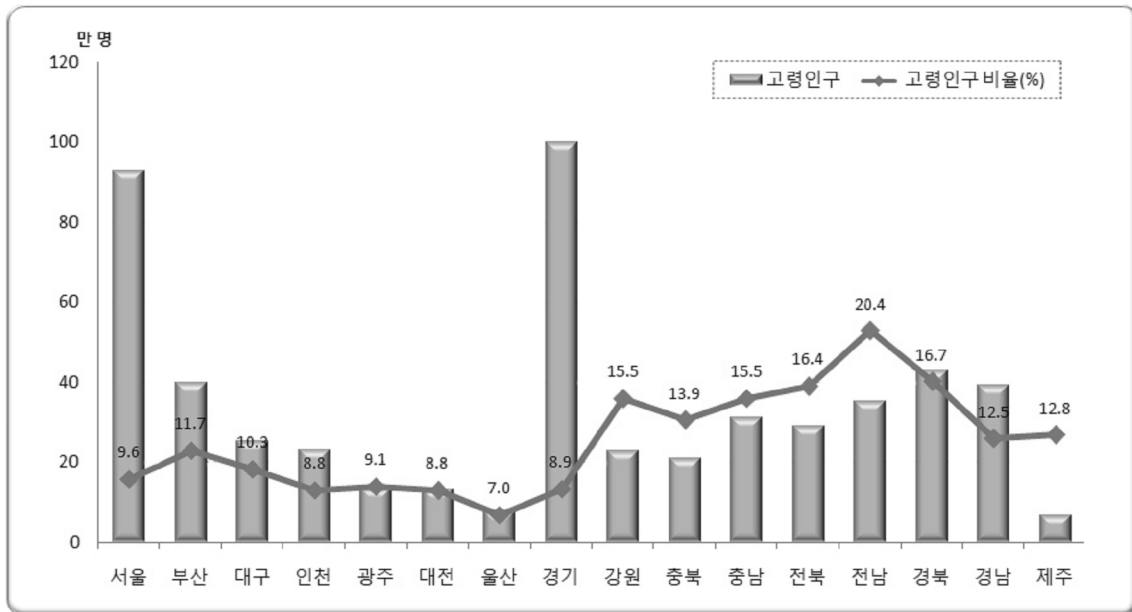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1a: 9.

〈그림 5〉 2010/2005 시도별 인구 증감률

2. 경상북도의 정성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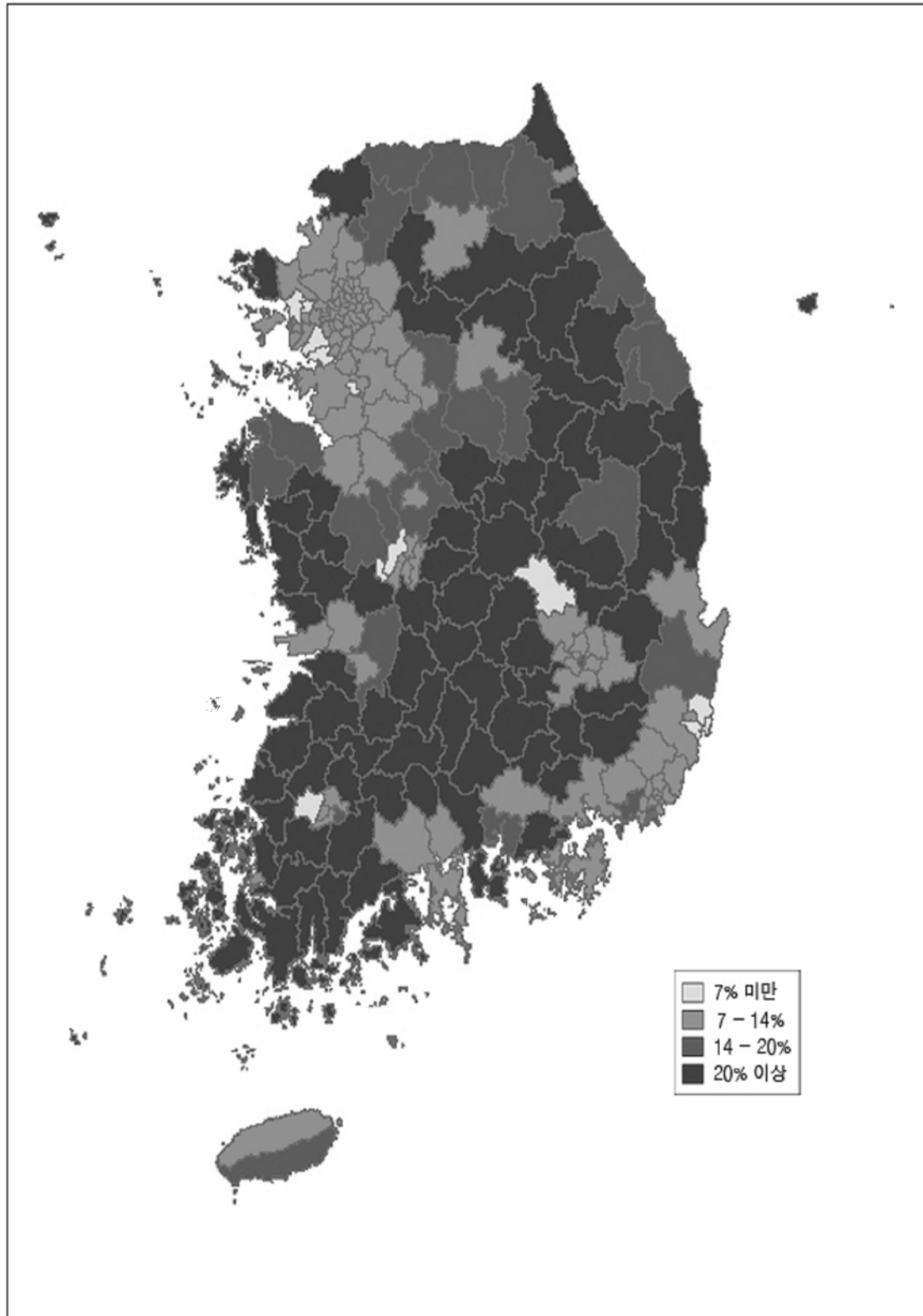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까지의 지역불균형발전의 정도를 보여주고 나아가 앞으로의 지역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오히려 정성적인 측면이다. <그림 6>과 <그림 7>을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료: 통계청, 2011a: 21.

<그림 6> 2010년 시도별 고령인구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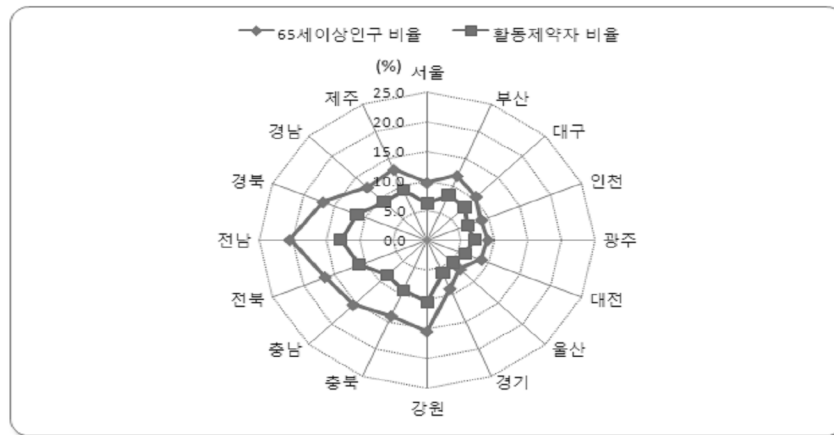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한다. 경상북도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2011a: 24.

〈그림 7〉 2010년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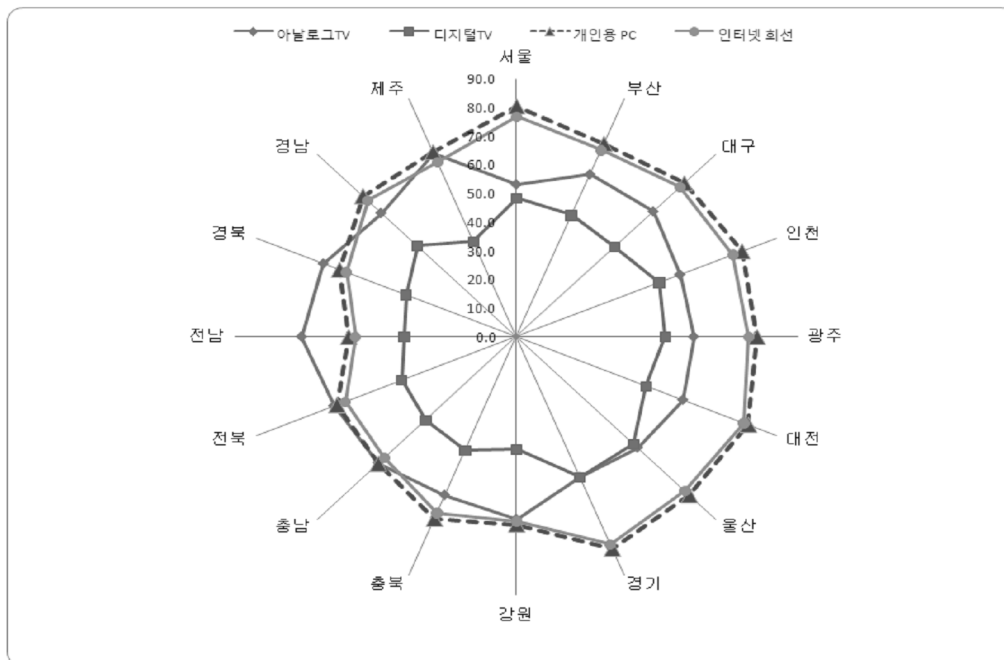
경상북도의 경우 이러한 노령화현상은 65세 인구의 비율의 증가를 넘어서, 활동 제약자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경상북도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혁신, 파급효과 등의 창조를 어렵게 한다.



자료: 통계청, 2011d: 30.

〈그림 8〉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및 활동제약률(2010)

즉 현재 한국에서 인구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인구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인구의 질적 성장과 혁신과 창조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이다. 그런데 노령화 인구는 이러한 혁신과 창조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일례로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이다. <그림 9>를 보면 경상북도의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료: 통계청, 2011c: 28.

〈그림 9〉 지역별 정보통신기기 보유가구 비율(2010)

문제는 정보화가 ‘외부성(externality)’과 ‘우연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간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성우·임형백(2005)은 정보화가 오히려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더 크게 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임형백(2008: 246)은 정부의 정보화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동일한 물리적 정보기기를 제공하여 기회격차를 줄이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개인의 능란한 활용에 따라서 활용격차가 발생하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에 따른 수용격차가 발생한다. 즉 정보격차에는 1단계 기회격차보다 2단계 활용격차, 3단계 수용격차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표 10〉 정보격차의 유형

정보화의 단계	정보화의 목표	정보격차의 유형	정보격차의 원인
1단계	정보기회의 확산	기회격차	보편적 접근
2단계	정보접속의 강화	활용격차	능란한 활용
3단계	정보가치의 확충	수용격차	주체적 향유

자료: 임형백, 2008: 246.

VIII.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격상시키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혁신⁸⁾(innovation)의 창출과 네트워크의 구축에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었다(임형백, 2013b: 146). 이후 이명박정부도 큰 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러도 지역불균형은 더 심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최근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은 크게 〈표 11〉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낙후지역중심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즉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도시권을 성장거점(growth center)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임형백, 2013a: 18).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성장거점전략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8) Joseph Alois Schumpeter(1883-1950)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혁신을 접근했고, Friedrich List(1789-1846)가 국가현신시스템 차원에서 혁신에 접근하였다(안두순, 2009).

〈표 11〉 중추도시권 육성방안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	'네트워크(Network)' 방식
방향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	도시를 연계 개발
내용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	인접한 규모가 비슷한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것
주된 육성수단	도시재생	도시재생
규정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

자료: 임형백, 2013a: 18.

중추도시권의 육성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0〉과 같다. 이는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 채택하였던 성장거점(growth center)전략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이 목표로 하는 파급효과도 1950년대부터 이미 등장한 개념이다. 문제는 파급효과의 창출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자료: 연합뉴스, 2013.04.04.

〈그림 10〉 중추도시권 육성 개념도

일반적으로 유럽대륙의 국가들보다는 영·미권 국가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이러한 영·미권 국가들보다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임형백, 2012b: 20, 2012c).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노령화라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더 이상 인구의 증가라는 양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혁신, 성장거점, 파급효과, 네트워크 구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온 개념이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표현은 달라졌지만, 이러한 개념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 공통적인 아이디어는 첫째는 발전된 지역에서는 주변의 저발전된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저발전된 지역에서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혁신(아이디어, 지식, 창의성 등)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지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절대적인 지역균형발전은 가능하지 않다.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공간의 자기강화적 메카니즘’이 작동한다(임형백, 2012c). 더구나 지역불균형발전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집적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현실에서는 오히려 집적효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나아가 초광역경제권(Mega-City Region)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간의 상대적 불균형발전의 상황에서 불균형발전이 가져오는 이익을 취하면서, 불균형발전이 가져오는 피해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발전된 지역에서의 파급효과 이외에 저발전된 지역에서의 혁신의 창출이 필요하다. 경상북도는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학력자일 것이다. 따라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특별시·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의 혁신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고 하여도, 특별시·광역시와의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보다 발전되고 인구유입이라는 유리한 여건을 가진 특별시·광역시보다, 오히려 더 큰 혁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의 창출은 ‘통념의 편안함’보다는 ‘역발상의 불편함’에서 나온다.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2003.2.21.,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 지침.
- 김광호, 2008,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1-76.
- 김선기, 2013, “신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뉴스레터, 44: 6-9.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9, 신지역개발론, 경기: 한울아카데미.
- 대한민국정부,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서정해, 2009, “MCR(Mega-City Region) 경쟁력에 기반한 광역경제권 정책,” 지역경제, 5(3): 25-42.
- 안두순, 2009, 혁신의 경제학, 서울: 아카넷.

- 이규환, 2005,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개정판.), 서울: 법문사.
- 이성우, 2004,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농업발전방안 모색," 2004 경기북부 지역혁신워크숍 자료집: 59-81.
- 이성우·임형백, 2005, 정보화와 농촌사회, 서울: (주)명진씨앤피.
- 이원섭, 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기조와 추진전략," 도시정보, 286: 3-15.
- 임형백, 2006,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과제: 혁신정책, 혁신의 성패요인, 전략산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수원 지역혁신발전 포럼 자료집: 27-49.
- 임형백, 2008, "안양시의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축 방향," 안양학논총, 8: 233-253.
- 임형백, 2009, "북한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전망: 북한내부요인과 통일 이후 경기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1(3)(통권 40호): 85-112.
- 임형백, 2011a,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한국정책연구, 11(3): 235-257.
- 임형백, 2011b, "안양시의 공간경쟁력," 안양학논총, 11: 183-205.
- 임형백, 2012a, "경기도의 지역상생 전략," 경기개발연구원(의정포럼) 지방의정세미나 및 경인행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31-60.
- 임형백, 2012b, "한국지역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1-28.
- 임형백, 2012c, 한국 국토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경기: 한울.
- 임형백, 2013a, "공간구조를 고려한 구미시의 경쟁력 제고 방향," (사)한국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2.
- 임형백, 2013b,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충청북도에 주는 시사점: 1970년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참여정부, 이명박정부까지의 경과와 실패," 충북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8-154.
- 임형백·조중구, 2004, "한국과 EU의 농촌개발의 비교," 농촌계획, 10(2): 25-34.
- 장재홍·김동수·박경·정준호, 2008,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과 구조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산업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 2012,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지역발전위원회.
- 최막중·문채·임형백, 2012, 제주공항개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최병선 외 2인, 2004, "공간계획 체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4정판.), 서울: 보성각: 151-179.
- 통계청, 2011a,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
- 통계청, 2011b,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통근·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
- 통계청, 2011c, 2010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 정보통신기기, 교통수단 부문 표본집계 결과.
- 통계청, 2011d, 2010 인구주택총조사 여성, 아동, 고령자, 활동제약, 사회활동 부문 표본집계 결과.

- Friedmann, J., 1973,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
- Friedmann, J., 1975, "The Spatial Organization of Power in the Development of Urban System Growth," J. Friedmann and W. Alonso (eds.), *Regional Policy Reading in Theory and Applications*, Massachusetts: MIT Press: 266-304.
-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st, F., 1841,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 Stuttgart: Wunderlich.
- Myrdal,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DuckWorth.
- Nurkse, R., 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stein-Rodan, P. N., 1961, "Notes on the Theory of the Big Push," in H. S. Ellis(ed.), *Economic Development for Latin America*, London: Macmillan: 57-66.
- Sundrum, R. M., 1983, *Development Economic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Policy*, London: John Wiley & Sons.